

# 美 “北 BDA 계좌 선별 해제 검토”

## 北 합법자금 1,200만弗 대상...中 입장이 최대 변수 부시 “6자회담 조기 개최 희망, 김정일 진지해져야”

미국이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 관할인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여 있는 북한자금 2,400만 달러 중 합법자금 800만~1천200만달러를 선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이를 위해 6자회담 재개 이전에 BDA 조사를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아직 최종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 고위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미 행정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 재무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합의에 맞춰 지난해 9월 돈세탁, 위폐 등을 이유로 동결한 BDA의 북한자금 2천400만 달러에 대한 조사 작업을 가급적 6자회담 재개 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재무부는 현재 북한의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 문제에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1일 로이터 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약속을 위반하고 협상에 임하지 않은 전력을 갖고 있다”면서 “선택은 김정일의 몫이지만 그가 진지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6자 회담이 조기 개최되길 희망하며 회담이 성공하길 바란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심합의도 불구,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손 매코맥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은 동결된 해외은행계좌에 접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해외계좌 동결 문제와 다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계좌 동결 해제 문제를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근본원인인 북한의 불법행위를 따져보는 것”이라며 “6자회담이 재개되면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바라며,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BDA 등 대북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검토중이며, 북한이 성의를 보일 경우 전향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코맥은 그러나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화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도 제재 이행을 늦추겠다는 암시는 없다”고 밝히, 금융제재 해제 문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대북 제재는 별개로 운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 檢, 이강원 前 행장 영장 청구 ‘외환銀 혈값 매각’ 실체 드러나나

검찰이 외환은행 혈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게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2003년 7월을 전후한 외환은행 매각 비리 의혹의 실체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8개월 가까이 외환은행 혈값매각 의혹이라는 본체와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비자금 조성, 로비 의혹 등을 함께 수사한 끝에 톤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라는 ‘피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이어 이강원 전 행장을 사법처리하는 단계로 곧바로 넘어가려는 것은 그가 외환은행의 최고 경영자였다는 점에서 혈값매각 의혹이라는 몸통 수사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의미한다.

있지만 제대로 산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행장 외에 이달용 전 부행장과 외환은행 실무 관계자, 금융 감독 당국 관계자, 일부 자문사 관계자들도 사법처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어 내주 중 3~4명의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짜 몸통은 누가...논란 가능성

이달용 전 부행장 등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을 처벌하

## 검찰, 8개월 수사 ‘꼬리잡기’ 개가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강원 전 행장은 매각 관련 핵심 인물이다”라고 밝히 이 전 행장을 중심으로 2003년 상황이 전개됐음을 내비쳤다.

◇금융 당국으로 확대 가능성=연쇄 사법처리 예고 = 이 전 행장에게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손해의 책임을 묻는다면, 당시 매각 근거로 사용된 각종 수치 등 외환은행의 경영 자료 역시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릴 여지도 있다.

검찰은 이 전 행장 등 관련자들을 몇 달 간 조사한 끝에 매각 당시 BIS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됐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

게 되면 남은 것은 매각 당시 대주주였던 정부의 판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점이다.

검찰은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씨와 청와대 정책수석을 맡았던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창재 전 금감위 원장 등 전·현직 고위 경제관료들을 모두 조사했다.

남은 사람은 톤스타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장에서 고문으로 몸 담았던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정도다.

그는 당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겸 김석동(현 금감위 부위원장) 금감위 감독정책 1국장 등 인맥을 통해 톤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갖도록 법률적 조언을 하는 등 막후에서 움직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부총리를 몇 개월째 출국금지 조치만 해놓고 “때가 되면 부른다”며 조사를 미뤄왔다.

## ‘인혁당’ 유가족 국가에 340억 소송

유신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을 했다가 사형당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연루자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우홍선씨의 부인 강순희(73)씨 등 46명은 소장에서 “국가 조사 결과 이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권력의 오용·남용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임이 밝혀졌다.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족들은 자신의 남편·아버지·형제들이 억울하게 사형 집행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이 무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30여년 동안 사회로부터 누명을 쓰고 압박과 차별을 받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원고측은 유족별로 11억5천만원~48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현재 형사재판 재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 김대중 도서관 ‘전시실’ 개관

### 각종 사료 500여점 장서 3천여권 진열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관장 류상영 국제대학원 교수) 전시실 개관식이 2일 오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관식에는 김 전 대통령 내외 외에 한명숙 국무총리,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이해찬 전 총리, 정청영 연세대 총장,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김대중 도서관 후원회장),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 장관(도서관 후원회 상임이사), 함세웅 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5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 바로 옆에 위치한 김대중 도서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직 대통령 도서관으로 전시실은 도서관 내부 지상 1~2층, 지하 1층 총 500평 공간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졌다.

전시실에는 김 전 대통령이 기증한 각종 사료 500여점, 대통령 재임시 해외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 189점, 장서 3천여권, 각종 영상 자료가 진열돼 있다. 도서관 측은 개관을 기념해 당분간 입장료 없이 전시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와 한명숙 총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시실’ 개관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중심 한·일 지방교류 추진하겠다”

### 코바야시 소장, 전남대 강연서

일본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코바야시 나오히토(小直直人) 소장은 2일 전남대 사범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전남대 일본문화연구소에서 열린 전남대 일본문화연구소에서 “한·일 교류의 폭을 넓고 깊게 하려면 다층적·다면적·미래적인 한·일관계 실현을 위한 ‘감동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국제교류기금은 국제문화교류사업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조화있는 대외관계 유지·발전을 위해 설립됐으며, 문화예술 교류·일본어 해외 교육·일본 연구 및 지적 교류 활성화를 주로 하고 있다. 일본 도쿄(東京)에 본부가 있으며 서울문화센터 등 해외에 19개 거점을 두고 있다.

코바야시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일본 국제교류기금 사업에서 한국은 가장 중점국가”라면서 “중견 지도자 및 전문가 교류 강화, 시민과 민간



코바야시 일본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이 2일 전남대 교수회의실에서 교수·강사·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위자라기자 jrwi@

의 교류 활성화, 한·일교류네트워크 구축 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바야시 소장은 특히 “광주와 같은 지방의 경우 일본인이나 일본 문화에 직접 접할 기회가 적어 교류가 많지 않았다”면서 “광주가 문화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광주에 역점을 두고 지방 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바야시 소장은 또 “인터넷 시대

**쓸수록 남는 전기온풍기 - 에콜로**  
물 거름, 난방비 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철권 및 도시권주요시점  
032-561-1110 www.ecoloco.kr

**결혼정보 모모**

전화: (082) 223-5949  
FAX: 010-9944-0882